

December 2024.
No. 305

INSS

전략보고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경제안보 리스크와 대응방향

김경숙 책임연구위원
kgs0717@inss.re.kr

- I. 문제 제기
- II. 트럼프 2기 경제안보 정책과 특징
- III. 우리의 경제안보 리스크 점검
- IV. 대응방향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경제안보 리스크와 대응방향

I. 문제 제기

II. 트럼프 2기 경제안보 정책과 특징

1. 트럼프 2.0 경제안보 정책
2. 트럼프 2기의 특징 : MAGA의 속도감 있는 추진

III. 우리의 경제안보 리스크 점검

1. 기회요인
2. 위협요인

IV. 대응방향

1. 미중 경쟁 심화 등 글로벌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에 대비
2. 미국 우선주의 2.0과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
3.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경제외교 강화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경제안보 리스크와 대응방향

저자 | 김경숙

국문 초록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글로벌 안보·경제에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과 의회를 공화당이 차지(clean sweep)하면서 더 강력한 트럼프 2기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2기 경제안보 정책의 핵심은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에서 ‘마가노믹스(MAGAnomics)’로 대체, 미국 우선주의 2.0 실현을 위한 관세와 수입규제 강화, 탈환경 정책 등 바이든 정책 지우기, 중국과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 추진이다. 트럼프 2기의 특징은 MAGA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될 전망이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의회와 행정부 내각에 트럼프 측근들이 대거 입성했고 안보관점의 경제·통상 연계 강화로 상무부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친시장·친기업 정책으로 기술관료(technocracy)의 영향력도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2기에 우리 경제안보의 기회 요인으로는 중국과 초격차 유지 등 미중 경쟁 격화에 따른 반사이익, 원전, 방산산업과 바이오산업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위협요인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인 한국에 대해 자동차 등 흑자 품목에 표적 관세, 보조금 축소와 FTA 재협상 등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경제안보 리스크는 증가할 것이고 반도체, 전기차와 배터리 등의 수출 여건도 악화할 것이다. 우리의 대응 방향으로서는 첫째, 미중 무역 전쟁 등 글로벌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경제안보 전략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달라진 환경에 대응해 새로운 경제안보 디리스팅 전략을 마련하고 경제안보 통합 거버넌스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미국 우선주의 2.0과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방어(Trump-proof)” 정책과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사안별 맞춤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경제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주제어: 트럼프 2.0, 관세, 마가노믹스, 기술관료제, 경제안보, 한미동맹

I 문제 제기

- 미중 패권경쟁 심화, 두 개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 글로벌 경제의 진영화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으로 안보·경제안보에 대전환 예고
 - 8년 만에 백악관, 상·하원 의회를 공화당이 차지(clean sweep)해 더 강력한 트럼프 2기가 될 전망
 - 트럼프는 당선인 연설에서 국경을 비롯해 모든 것을 고쳐 미국의 황금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언급
- 트럼프 2기는 미국 우선주의 2.0으로 1기보다 대중 견제 강화, 경제안보 중시와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 될 전망
 -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과 첨단기술 보호·육성을 위해 중국과 ‘전략적 디커플링(de-coupling)’을 추진하면서 관세(60%)와 규제를 수단으로 수출통제·무역장벽 강화 예상¹
 - 거래적 동맹관으로 동맹과 우방국에도 경제적 이익을 잣대로 보편적 관세(10%~20%)와 안보에서 책임 분담을 더 요구할 전망
- 이는 한국의 경제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트럼프 당선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우리의 경제안보 리스크를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트럼프 당선 이후 우리의 경제안보 리스크를 다룬 보고서는 일부 있으나 본 보고서는 당선 이후 인선 등을 중심으로 트럼프 2기의 특징을 분석하고 우리의 경제안보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1 공화당의 2024 대선 정강에는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의 보고서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진정한 의미(The True Meaning of Trump’s MAGA)」와 트럼프 캠프의 공약 「어젠다 47」의 내용이 대부분 담겨있다. Peter Navarro, The True Meaning of Trump’s MAGA: Lessons from the 2022 Republican Red Wave That Never Happened (New York: A Bombardier Books, 2023); www.donaldjtrump.com/agenda47;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24795052-2024-gop-platform-july-7-final>(accessed : August 20, 2024).

II 트럼프 2기 경제안보 정책과 특징

1. 트럼프 2.0 경제안보 정책

□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에서 ‘마가노믹스(MAGAnomics)’로 대체

■ 미국 우선주의 2.0, 안보를 통한 경제 안정

-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를 기치로 대내적으로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한 친성장 기조 강화, 대중 견제를 위해 트럼프 1기(2016-2020)보다 강력한 보호주의 무역·통상 정책 시행²

※ 트럼프 후보는 법인세율을 15% 또는 최소한 20%까지 낮추겠다는 의지 시현³

- 첨단산업 우위 유지와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온쇼어링(onshoring)과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 WTO 탈퇴 재추진, 양자 중심 무역협정(FTA) 재협상,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즉시 폐기 등

■ 관세 중심 수입규제 강화

- 전기자동차와 반도체 등 핵심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해외 기업 보조금 반대, 모든 수입품에 관세 부과
- △ 60% 대중국 관세, △ 보편적 10% 기본관세 추가 부과 △ 상호 관세 부과를 위해 트럼프 상호 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 제정 등 중국을 포함해 모든 교역 상대국에 관세 인상

※ 대통령에게 발동 권한이 부여된 관세조치 근거는 관세법 338조, 통상법 122조, 201조, 301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양⁴하며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이미 활용, 3천700억 달러 규모의 대중국 관세 조치

□ 바이든 정책 지우기

■ 탈환경 정책

- 에너지 자립을 위해 에너지 안보와 공급 증대에 중점을 두고 화석연료 등 저비용 에너지 증대, 자

2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산업정책 전망과 국내 정책 대응방향,” 글로벌 이슈특집 2024-01.

3 2024. 7. 17 블룸버그와의 단독인터뷰

4 CRS (2016) Presidential Authority over Trade : Imposing Tariffs and Duties.

동차 연비 등 각종 환경규제 폐지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⁵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 ※ 2030년까지 신차의 50%를 무공해 차량으로 공급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폐기할 가능성
- 그러나, IRA 투자가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 의회 승인 필요 등으로 전면 폐기 대신에 보조금 지급 중단 또는 혜택 대폭 축소 가능성
- ※ 트럼프 후보가 직접 언급한 IRA 보조금 폐기는 공화당 정강에 제외되었고, 과거 중서부 지역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로 바이오 연료 관련 세액공제 철회에 실패한 사례

□ 중국과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 추진

- 중국을 경쟁국이 아닌 적국으로 인식해 안보 관련 기술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전략적 독립 추구
 - 엄격한 상호주의 기조로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 부과,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박탈, 미국 내 기간산업 및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금지 등 대중 직접 제재 강화
 - ※ 중국산 60% 관세 부과는 공화당 공약에서는 미언급되었는데 실제로 적용 시 중국의 성장률은 0.7~2.5%p 하락 가능성
 - 수출통제 범위 확대(금융투자·지식재산·인력), 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등 중국산 필수품 수입의 단계적 중단, 중국에 아웃소싱을 하는 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 금지 등 규제 강화

2. 트럼프 2기의 특징 : MAGA의 속도감 있는 추진

□ 상·하원 공화당 다수당과 트럼프 친위대의 의회 장악

- 대통령과 연방 상·하원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Red Sweep)하면서 트럼프는 단점 정부(Unified government)를 구성해 주요 공약정책의 추진력 확보
 - 1기 때와 달리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⁶ 출신의 트럼프 측근, 충성파(MAGA Republicans)와 대중 강경파가 행정부와 의회에 대거 입성함에 따라 트럼프가 추진하는 법안의 통과 가능성 지대
 - ※ 미국의 자동차 수입 관세는 2.5%에 불과하나 중국은 15%, EU는 10% 관세. 부품에 대해서도 비대칭적 관세장벽이 존재⁷하는 데 관세 인상 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 지대

5 taxnotes, "I'll Scrap IRA Tax Credits on Day 1, Trump Says", 2023.9.29., <https://www.taxnotes.com/featured-news/ill-scrap-ira-taxcredits-day-1-trump-says/2023/09/28/7hdjq>(accessed : September 20, 2024).

6 <https://agenda.americafirstpolicy.com/>

7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산업정책 전망과 국내 정책 대응방향," 글로벌 이슈특집 2024-01, p.48.

- 교육부장관에 린다 맥마흔(AFPI 이사회 의장), 국가안보보좌관에 마이클 왈츠(Michael Waltz), 중앙정보국(CIA) 국장 존 랫클리프 전 DNI국장(AFPI 미국안보센터 공동의장) 등이 대표적 AFPI 출신

■ 안보관점의 경제·통상 연계 강화 및 상무부 역할 강화

-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중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상무부가 무역대표부(USTR)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추가하면서 경제와 무역정책, 관세 시행 등 주도적으로 통상정책을 전담
 - ※ USTR 대표에 제이미슨 그리어(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 대표의 비서실장) 지명, 대중 강경파로 미국인 필요에 맞춰 모든 무역 협정을 재검점 해야 한다고 주장⁸
- 상무부 장관에 지명된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정권인수팀 공동의장은 관세·제조업 강화, 친가상자산 옹호자이자 대중국 강경파로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수출통제 등에 앞장서 집행할 전망
 - ※ 일론 머스크의 적극 추천으로 재무장관 하마평에 올랐으나 트럼프 최측근과의 갈등 속에 상무장관에 낙점, 결과적으로 USTR까지 관할하면서 위상 제고
- 재무장관에 선임된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는 트럼프 선거 캠프의 경제 고문을 맡았던 월가 출신의 실용주의자로 트럼프의 감세와 규제완화 공약을 우선 이행하되 관세에 대해서는 점진적 부과 입장
 - ※ 소로스의 제자로 검증된 월가 인사로 평가되고 있으며 재정적자 감축과 규제 완화, 석유 증산을 중시하며, 인위적인 달러 약세화나 무역 위축에는 부정적 입장

□ 4년 임기라는 시간의 제약성으로 신속한 정책 추진

- 트럼프 2기는 사실상 중간선거(2026년) 전까지가 정책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선순위의 정책들을 거침없이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
 - ※ 정권심판 성격의 미국 중간 선거는 현직 대통령에게 불리
 - 트럼프의 정부 운영 경험과 백악관·의회 권력 장악으로 1기 때 미처 못 한 의제를 포함해 공약 달성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시도할 가능성
 - ※ 트럼프 1기 집권 1년 만에 헤리티지 재단의 정책 제안(Mandate for Leadership) 가운데 64%를 실행⁹
 - AFPI는 취임 즉시 서명 가능한 300개 행정명령 초안을 준비했으며, 출범 시 첫날 발표할 행정명

8 “트럼프, 무역대표부 수장에 ‘대중 강경파’ 그리어 지명,” VOA 뉴스, 2024년 11월 27일, <https://www.voakorea.com/a/7878555.html>(검색일: 2024년 11월 27일).

9 Steven Rattner, “How Project 2025 Would Change the Country,”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9, 2024.

령 1호는 의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 국제 협정 탈퇴가 될 것임을 시사¹⁰

□ 기술관료제(technocracy)¹¹ 가능성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기업인들을 대거 등용함에 따라 감세와 규제 완화와 같은 친성장·친기업 정책 추진과 국가정책 결정에 시장의 영향력 확대
 - 독점금지법 완화 등 빅테크 기업에 관한 법령 집행에 있어 바이든 행정부보다 관대한 입장, 법인 세 인하 등 친기업 정책 채택
 - ※ 트럼프 1기에서도 감세와 친기업 정책으로 기업이익 확대와 주가 상승(연율+16.3%) 등 바이든 행정부에 서보다 높은 성과 기록(Forbes)¹²
 - 미국의 기술력과 디지털 경제력 우위 확보를 위해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질서’라는 새로운 체제가 부상할 가능성¹³
 - ※ 바이든의 AI 관련 행정명령(2023년) 폐지 예고

1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0506>

11 과학이나 기술 전문가에 의해 통제되거나 영향을 받는 정부 시스템을 의미. <https://dictionary.cambridge.org/ko/%EC%82%AC%EC%A0%84/%EC%98%81%EC%96%B4/technocracy> (accessed : September 20, 2024).

12 박미정·정예지, 미국 대선 이후 신정부 경제정책과 영향 점검, 국제금융센터 Issue Analysis, 2024. 11. 6.

13 Ian Bremmer, “The Next Global Superpower Isn’t Who You Think,” Foreign Policy, June 17, 2023, <https://foreignpolicy.com/2023/06/17/china-russia-us-multipolar-world-technology/> (accessed : October 5, 2024).

III 우리의 경제안보 리스크 점검

1. 기획요인

■ 미중 경쟁 격화에 따른 반사이익

-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 제한 등 미국의 대중국 기술봉쇄는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의 추격 속도를 지연시키고 초격차 유지를 위한 시간 확보기회로 작용
-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할 경우, 중국은 내수 시장과 막대한 보유 외환으로 트럼프의 무역 압박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는 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소비재 수출 등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 기대
- 트럼프는 대외 개입 자제와 동맹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국방력 강화를 위한 무기구매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방산분야가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

■ 트럼프 2기의 탈환경 정책으로 전통 에너지와 가스 및 원자력 발전 비중이 확대되면 국내에서도 LNG 발전의 중요성이 부각될 가능성

■ 차세대 전력 인프라 부문에서 기회 창출 가능성

-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이하 IIJA)’¹⁴은 초당적 협력의 산물로 노후 인프라 개선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¹⁵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2기에서도 지속될 전망
 - ※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 나은 재건’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향후 10년간 1.2조 달러 규모의 예산 투입 예정
- 미국에서 가동된 지 40년 이상 지난 송전선과 변압기 비중은 약 70%에 육박할 정도로 노후화된

14 U.S. Department of Treasury, “The Inflation Reduction Act: A Place-Based Analysis”, November 29, 2023; <https://home.treasury.gov/news/featured-stories/the-inflation-reduction-act-a-place-based-analysis> (accessed : September 15, 2024).

15 The White House, “FACT SHEET: One Year In, President Biden’s Inflation Reduction Act is Driving Historic Climate Action and Investing in America to Create Good Paying Jobs and Reduce Costs”, - August 16, 2023,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8/16/fact-sheet-one-year-in-president-bidens-inflation-reduction-act-is-driving-historic-climate-action-and-investing-in-america-to-create-good-paying-jobs-and-reduce-costs/>

상황으로 전력망 현대화를 위한 스마트그리드 투자에 3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¹⁶

- 노후 전력망 현대화를 위해 송배전 인프라 개선 및 확대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의 수주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 전력기기 교체 프로젝트 수주 경쟁에 적극 참여 필요

■ 미국의 바이오 제조역량 강화는 우리 바이오산업에 기회

- 미국은 팬데믹 이후 항생제·진통 해열제 등 필수 의약품의 중국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바이오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인데 트럼프 2기에서는 국민의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해서 복제 약 사용을 독려할 전망
-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의 탈중국 흐름과 일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시장 확대로 우리 바이오 제조업의 미국 시장진출에 기회가 될 전망¹⁷

2. 위협요인

■ 트럼프 1기보다 강화된 미국 우선주의 2.0으로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우려

-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과 해외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달러는 약세, 저금리, 상대국 통화는 강세이어야 하지만 감세, 규제 완화는 달러화 강세 요인, 관세 인상 역시 원래 의도와 상반된 정책 효과 발생 우려
 - ※ 미 내부적으로 인플레이션 부양으로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 자극, 상대국 통화 약세 자극
- 미중 간 기술경쟁·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미국은 중국에 고율 관세나 중국의 우회 수출로 인 멕시코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자동차, 전자 등 멕시코를 미국 수출기지로 하는 한국 기업에 타격 우려
- 고율 관세로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면 중국에 반도체 등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의 대중 수출도 동시에 감소 우려가 있으며, 중국의 과잉 생산 물량 저가 유입 팽 경쟁 심화

16 이상현, “글로벌 투자확대 미국으로 통한다”, 『Industry Report』, 하이투자증권, 2023

17 안대규, “특허만료 도래한다”…판 커지는 바이오시밀러, 『한국경제신문』, 2024년 11월 25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2535151>(검색일: 2024년 11월 25일).

- 트럼프는 한국을 대미 흑자국이자 국방비 지출이 GDP의 3% 기준에 못 미치는 동맹국으로 인식해 관세와 보조금 축소 정책 등 보호무역 정책 강화 시 우리의 경제안보 리스크 증가 및 수출 여건 악화 우려
 - 미국 내 첨단산업 투자 급증, 자동차,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 등으로 대미 수출이 증가하면서 대미 흑자도 확대¹⁸
 - ※ GDP 대비 군사비 지출 2.1%(2022),¹⁹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0.03% 수준으로 한국은 2023년 444억 달러, 2024년에는 500억 달러 후반대 대미 흑자 예상²⁰
 -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나 자국 산업 보호 여론 고조 시 한미 FTA 재협상 위협, 자동차 등 무역수지 적자품목 표적 관세 강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 안보와 통상정책을 연계할 가능성
 - ※ 자동차가 대미 흑자의 60% 이상을 차지
 -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약 40% 차지하는 대미(19.2%)·대중(18.9%) 수출이 동시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²¹
- 보편 관세와 보조금 축소는 대미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에 부담 가중, 인플레이션, 수출 감소 등 경제적 타격 확대 우려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J)의 ‘아젠다 47’ 정책 제안을 실행할 경우, 중국과 전략적 디커플링, 보호무역주의 여파로 우리 산업(전기 자동차, 이차전지, 철강 산업 등)에도 적신호
- IRA 청정차량 구입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전면 폐기할 경우, 미국 진출 우리 기업의 전기차 가격상승과 전기차 배터리 수요 감소 등으로 친환경 산업 관련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우려²²
 - 테슬라 같은 미국산 전기차 보급은 확대하고 외국산 전기자동차의 수입은 진입장벽을 높이겠다는 기조
 - ※ 전기차 보조금 폐지 시 국내 배터리 제조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미국에 동반 진출한 배터리 핵심소재 기업의 매출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 반대에서 지지로 선회했으나, IRA 청정에너지

18 <https://www.yna.co.kr/view/AKR20241018102300003>

19 https://www.index.go.kr/unif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99

20 <https://www.yna.co.kr/view/AKR20241018102300003>

21 이후권, “2024년 상반기 대미 무역 및 주요 수출 품목 동향 : 미국, 한국이 최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 2024년 8월 6일.

22 강구상, “2024년 미국 대선이 국내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슈와 시선 01, p.36.

산업에 대한 보조금수혜 지역은 공화당 지역구라는 점에서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축소되더라도 유지될 가능성

※ 보조금 폐지로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정채된 테슬라 전기차의 점유율을 높이거나 자율주행 기술 규제 완화를 겨냥했다는 분석 제기

■ 트럼프 1기처럼 우리 철강 산업에 보편 관세가 시행되면 대미 수출에 타격은 물론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저가 중국산 철강재가 국내 유입될 경우 내수 시장 타격 등 그 여파가 심대

-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철강 기업은 쿼터제(연간 263만 톤 정도) 적용을 받고 있어 보편적 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

■ 반도체법(CHIPS)은 트럼프 1기에 설계된 것으로 정책 승계 및 발전이 예상되나 반도체 공급망 미국 내재화 등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인센티브 축소 우려, 중국 내 우리 기업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조치 불허 가능성 지대

※ VEU는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규정에서 예외 적용

- 우리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규정 예외 적용이 해제될 경우,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피해 등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

■ 대미 투자 확대 압박으로 대규모 투자 시 국내 투자 여력 감소 우려, 부품수급, 인력배치 및 고임금 문제, 한국과 미국 거점 간 고객 및 인력 쟁탈전 발생 가능성

※ 과거 폭스콘도 트럼프 시기 대미 LCD 공장 투자를 약속했다 미국 내 여건 악화로 무산된 사례 (WSJ 2022.1.2.)

- 친가상화폐·친기업 정책으로 투자자들이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 미국 주식 시장으로의 자산을 옮길 경우, 외국인의 매도세 증가로 우리 주식 시장의 변동성 증가 우려

IV 대응방향

1. 미중 경쟁 심화 등 글로벌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에 대비

□ 새로운 경제안보 디리스팅 전략 마련

-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안보·기술과 결합하는 글로벌 안보환경에서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미중 첨단기술 패권경쟁 심화,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와 글로벌 통상환경이 더 열악해질 전망
 - 탈세계화, 진영화로의 국제질서 재편 가속 속에 기술우위를 유지하려는 미국과 기술 고도화 및 자립을 추구하는 중국 간 힘, 시장, 표준 경쟁 심화로 기술보호주의 경쟁 심화와 진영화 경향
 - ※ 경제안보 차원에서 기술우위를 위해 반도체, AI, 바이오 등 첨단·이중용도 기술에 대한 수출·투자 통제 강화
 -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당일에 펜타닐 등 마약 문제 해결 시까지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모든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 부과(additional 10% Tariff, above any additional Tariffs)를 시사²³
 - 이에 대응해 중국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7대 첨단기술의 세계 수준 도달을 목표(2035)로 기술 자립 및 공급망 내재화(DVC) 추구
 - ※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미중 갈등 속에서 협상 중재자 역할을 할 가능성
- 미중 경쟁과 지정학적 리스크 불확실성 고조에 대비해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미중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은 '극대화' 하는 전략 필요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중 패권경쟁의 성격(무역-기술과 공급망-금융경쟁으로 확장)을 이해하고 한국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새로운 경제안보 디리스팅 전략 마련 필요
 - ※ 중국 압박을 위한 반도체와 배터리 쿼드 동맹 형성 가능성
 - 한미 경제안보 협력과 공급망을 다변화하더라도 중국도 우리의 시장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인식하고 한중관계 관리 필요
 - ※ 우리의 무역흑자 40%, 반도체의 45%를 중국에 수출, 배터리 원자재 리튬 81%, 코발트 84%를 중국에 의존

23 Evelyn Cheng, "Trump vows an additional 10% tariff on China, 25% tariffs on Canada and Mexico," CNBC, November 25, 2024; <https://www.cnbc.com/2024/11/26/trump-vows-an-additional-10percent-tariff-on-china-25percent-tariffs-on-canada-and-mexico.html> (accessed: November 26, 2024).

□ 경제안보 통합 거버넌스 정비

■ 미중 간 첨단기술 경쟁의 영역 확장에 대비해 새로운 경제안보 디리스팅 전략에 따른 경제안보 통합 거버넌스 정비

- 핵심기술 분야에서 미중 간 탈동조화 추세 심화, 진영 간 수출통제와 보복조치에 대비해 산업정책과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조직 확대 및 통합 거버넌스 필요
- 부처 간 협력과 국내 산업 지원 인센티브(보조금, 세액공제, 연구개발 등)를 통합·조정하고 적시 사안별 지원과 대응을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대응 전문인력 양성과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 지속

■ 경제안보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제안보 경쟁이 기술 탈취를 위한 해킹, 랜섬웨어 등 하이브리드 영역에서 격화될 것에 대비해 우리 주력산업이나 민감한 분야에 미칠 리스크 분석 및 포괄적 대응 수립
 - ※ 미중 간 경쟁이 반도체, 전기차, AI를 넘어 양자컴퓨터, 바이오 기술로 확대될 전망
- 핵심산업 관련 리스크(공급, 수요, 통제 등)에 대한 분석과 주요 공급망에 대한 위험 예방·식별·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공급망 위기관리 대응체계 및 매뉴얼 개발
 - ※ 핵심기술의 공급망 감시와 데이터, 사이버, 주요 인프라 등의 취약성 보완

2. 미국 우선주의 2.0과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

□ “트럼프 방어(Trump-proof)” 정책 마련

■ 우리 산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관세, 화석연료, 첨단산업의 불확실성으로 철강 및 에너지,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우리 주력산업이나 민감한 분야에 미칠 위험을 최소화

- 트럼프 2기 첫 내각의 통상무역 분야 인선을 포함해 정책과 규제 동향, 관세 인상, 수입규제와 보조금 수혜요건(IRA 상 FEOC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대미 협상력 및 적시 외교·통상 대응력 강화
-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가동해 미국과 글로벌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핵심기술의 공급망 점검과 조기경보 시스템을 보강하고 민관협력 강화 등 선제대응

■ 대응 논리 개발 및 한미 소통 채널 조기 가동

- 트럼프는 예측이 어려운 리더십 스타일로 고강도 관세 부과를 전면 시행하기보다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며, 과감히 요구하고 일부 양보하는 ‘매드맨 전략’은 동맹과의 협상에도 적용

될 전망

- 한국이 중요한 안보 파트너이자 경제적·전략적 이익을 줄 수 있는 파트너임을 인식시키는 대응 논리 발전 필요

※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된 것을 비롯한 긍정적 경제효과를 어필

- 트럼프는 대중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전략을 중시하는 만큼 1기와 달리 아시아 동맹국들과 더 협력적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한미 소통채널 조기 가동과 일본, EU 등 우방국들과 공동대응 모색
-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동참 요구,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비해 첨단기술의 위혐요인 식별과 자급력·기술력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 확보, 신수요 창출을 위한 민관협력, 국내 투자 촉진과 대응 지원 강화

※ 특정 국가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의 비중 축소 등 원자재의 역내 내재화 비율 확대의 경우, 채굴이나 정련 시 광산 채굴 시 막대한 투자재원과 시간 소요 등 정부 주도 장기적 프로젝트가 불가피

□ 사안별 맞춤 전략 마련

- 한국에 FTA 재협상 또는 자동차, 철강 등 '표적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해 북미전략 수정 불가피

- 트럼프 2기에는 미국 내 기존 전기차 생산설비에 전기차 생산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종까지 생산을 고려하고 EU 등 새로운 수출 시장 판로 개척 필요
- 미국의 한국산 철강 관세 부과나 중국산 철강 수입제한으로 국내 시장에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가 현실화될 경우 대비해 국내 철강 산업 보호 선제 마련 및 저탄소 철강 정책 추진 필요
- 대미 흑자를 희석하기 위해 미국산 물자 수입(세일가스 등) 전략적 증대, 대미 투자 확대 고려

-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위기 돌파 전략 필요

-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은 중국 비중이 컸는데, 기존에 중국에서 가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던 방식이 어려워질 전망으로 대미 수출 확장과 판로 다변화 고려 필요
- 기업의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반도체 펀드 확대집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업 대학원 지원 등 반도체 산업의 위기 극복과 반도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
- ※ 정부는 내년 소부장·팹리스·제조 등 반도체 전 분야에 걸쳐 14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 공급과 반도체 펀드 투자 집행 등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마련(11.27)²⁴
- 차세대 기술경쟁의 핵심인 AI 반도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기술 자립과 경쟁우위를 위한 보호·육성을 강화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 선점으로 미

2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반도체 위기 돌파 나선다…내년 정책금융 14조원 이상 투입,” 2024년 11월 27일;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775&pWise=webPush>(검색일 : 2024년 11월 27일).

국의 엔비디아와 한국 기업의 동반 성장 추구

※ 엔비디아의 AI 칩(HBM)은 SK하이닉스가 독점공급을 하고 있으나, 최근 삼성 등 우리 기업의 경쟁을 유도

■ 인공지능(AI) 시대 전력 수요 확대에 대비 소형원전(SMR) 등 에너지 협력 강화

- 디지털 전력 수요가 확대되면서 원전 특히 SMR의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미국의 원전 현대화 지원과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에 대비해 SMR 공동 수주 등 한미 간 원전 협력이 더욱 강화할 필요

※ 미국은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견제 프로그램인 FIRST(Foundational Infrastructure for Responsible Use of SMR Technology)를 가동

- 미국은 미중 해양력 경쟁에서 격차를 좁히기 위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요청한 만큼 미국의 합정 유지, 수리와 정비(MRO) 지원, 한국의 LNG 운반선 건조로 미국의 해양력과 에너지 독립을 지원

※ 한화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를 계기로 한미 조선 협력을 대미 레버리지와 우리 조선업의 한 단계 도약 기회로 활용

3.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경제외교 강화

■ 중동 내 학전, 양안 관계 긴장과 같은 예기치 못한 지정학 리스크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과 에너지 위기 상황 초래 가능성에 대비

-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컨트롤타워로서 경제안보품목의 민감성, 취약성,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점검 보완하고, 핵심품목의 내재화와 안정적 조달 등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강화

※ 디지털, 탄소중립, 기술경쟁 등 전 분야에서 상류, 하류 부문 공급망 점검

-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 및 국내 도입을 위한 지원 강화, 우려국으로부터 원자재 수급 제한, 불투명한 공급망으로부터 원자재 조달 여부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규제 모니터링

■ 미중 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기 기회 요인을 극대화할 필요

- 인도태평양, 북미와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 시장 진출 확대와 조달 시장 개척을 위해 민관협력 체계 강화 및 현지 협상 외교 지원
- 보건·기후 변화 대응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해 재원 공여와 글로벌 규범 제정에 외교력을 발휘해 미중 사이에서 활동 공간의 여지 확보

참고문헌

- 강구상. “2024년 미국 대선이 국내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슈와 시선 0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반도체 위기 돌파 나선다…내년 정책금융 14조원 이상 투입.” 2024년 11월 27일;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775&pWise=webPush>(검색일 : 2024년 11월 27일).
- 박미정·정예지. 미국 대선 이후 신정부 경제정책과 영향 점검, 국제금융센터 Issue Analysis, 2024. 11. 6.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산업정책 전망과 국내 정책 대응방향.” 글로벌 이슈특집 2024-01.
- 안대규. “특허만료 도래한다”…판 커지는 바이오시밀러.” 한국경제신문, “트럼프, 무역대표부 수장에 ‘대중 강경파’ 그리어 지명.” VOA 뉴스, 2024년 11월 27일, <https://www.voakorea.com/a/7878555.html>(검색일: 2024년 11월 27일).
- 이상현. “글로벌 투자확대 미국으로 통한다”, 「Industry Report」, 하이투자증권, 2023
- 이후권. “2024년 상반기 대미 무역 및 주요 수출 품목 동향 : 미국,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 2024년 8월 6일.
- CRS (2016) Presidential Authority over Trade : Imposing Tariffs and Duties
- Cheng, Evelyn. “Trump vows an additional 10% tariff on China, 25% tariffs on Canada and Mexico.” *CNBC*, November 25, 2024; <https://www.cnn.com/2024/11/26/trump-vows-an-additional-10percent-tariff-on-china-25percent-tariffs-on-canada-and-mexico.html> (accessed: November 26, 2024).
- Bremmer, Ian. “The Next Global Superpower Isn’t Who You Think.” *Foreign Policy*, June 17, 2023, <https://foreignpolicy.com/2023/06/17/china-russia-us-multipolar-world-technology/> (accessed : October 5, 2024).
- Navarro, Peter. *The True Meaning of Trump’s MAGA: Lessons from the 2022 Republican Red Wave That Never Happened* (New York: A Bombardier Books, 2023); www.donaldjtrump.com/agenda47;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24795052-2024-gop-platform-july-7-final>(accessed : September 20, 2024).
- Rattner, Steven. “How Project 2025 Would Change the Country,” *The Newyork Times*, September 9, 2024.

taxnotes. “I’ll Scrap IRA Tax Credits on Day 1, Trump Says”, 2023.9.29., <https://www.taxnotes.com/featured-news/ill-scrap-ira-taxcredits-day-1-trump-says/2023/09/28/7hdjq>(accessed : September 20, 2024).

The White House. “FACT SHEET: One Year In, President Biden’s Inflation Reduction Act is Driving Historic Climate Action and Investing in America to Create Good Paying Jobs and Reduce Costs”, 2023.8.16.,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8/16/fact-sheet-one-year-in-president-bidens-inflation-reduction-act-is-driving-historic-climate-action-and-investing-in-america-to-create-good-paying-jobs-and-reduce-costs/>(accessed : September 20, 2024).

U.S. Department of Treasury. “The Inflation Reduction Act: A Place-Based Analysis.” November 29, 2023; <https://home.treasury.gov/news/featured-stories/the-inflation-reduction-act-a-place-based-analysis>(accessed : September 15, 2024).

<https://agenda.americafirstpolicy.com/> 검색일: 2024년 11월 25일).

<https://dictionary.cambridge.org/ko/%EC%82%AC%EC%A0%84/%EC%98%81%EC%96%B4/technocracy> 검색일: 2024년 11월 25일).

<https://dictionary.cambridge.org/ko/%EC%82%AC%EC%A0%84/%EC%98%81%EC%96%B4/technocracy> (검색일: 2024년 11월 4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2535151>(검색일: 2024년 11월 25일).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9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0506> (검색일: 2024년 11월 25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1018102300003> (검색일: 2024년 10월 25일).

Abstract

Korea's Economic Security Risks and Strategic Response in the Trump 2.0 Era

Kyoung-sook Kim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election of Donald Trump for a second term as U.S. president signals a major geopolitical and economic shift, with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U.S.-China relations, global trade, and security dynamics. The anticipated “America First 2.0” policies could have both opportunities and risks for countries like South Korea, given their economic and strategic ties wi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Republican Party is taking over the presidential office and the Congress as a clean sweep, signaling a stronger second Trump term. The core of Trump’s second economic and security policy is to replace Biden’s policy of strengthening tariffs and import regulations to realize U.S.-first policy of 2.0, removing Biden’s policy such as de-environmental policy, and pushing for strategic decoupling from China. The second Trump term is expected to be a rapid pace of MAGA. A large number of Trump aides have joined the Republican-majority Congress and the Cabinet of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role of the Commerce Department is expected to be strengthened by strengthening economic and trade links from a security perspective. The pro-market and pro-business policies are expected to increase the influence of technocrats. In the second Trump term, opportunities for Korea's economic and security will likely include reflected profits from intensifying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such as maintaining a super gap with China, nuclear power plants, defense and bio industries. As Risks for South Korea,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is likely to strengthen its protection trade policy, such as reducing targeted tariffs and subsidies on surplus items such as automobiles, and

renegotiating FTAs, against Korea, which has a surplus in the trade balance with the United States. Our economic and security risks will increase, and export conditions for semiconductors, electric vehicles, and batteries will deteriorate. As for our response direction, first, we need to supplement our economic and security strategy in preparation for global economic and security uncertainties such as the US-China trade war. In response to the changed environment, a new economic and security derisking strategy is prepared and an integrated governance overhaul of economic and security is needed. Second, we need to prepare for US-firstism 2.0 and Trump risks.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Trump-proof” policy and strategies tailored to each issue, such as automobiles, semiconductors, and steel. Third, economic diplomacy to diversify supply chains should be strengthened. To navigate the risks, South Korea must craft a flexible and forward-looking economic and security strategy, focusing on diversifying trade relations, reinforcing critical sectors like semiconductors and defense, and positioning itself strategically in the context of the U.S.-China rivalry.

Keywords: Trump 2.0, Tariffs, Maganomics, Technology Bureaucracy, Economic Security, Korea-U.S. Alliance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INSS

전략보고

December 2024.
No. 305